

##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- 34호

「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」전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 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24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「동물보호법」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,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과 출입금지 장소를 지정함(안 제6조).
- 나. 맹견의 격리조치 및 출입금지 장소 등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
- 다.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라.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12조).

## 3. 의견제출

- 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건설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132, FAX 042-270-5049, E-mail : lms13@korea.kr)
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##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제4조(동물복지계획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2.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
3.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
4.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,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) ① 시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
2. 그 밖에 시장이 지정·공고하는 장소

제7조(맹견의 관리)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 보호조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동물병원
2. 시장이 맹견의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

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
2.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

제8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 시장은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호관리가 가능한 동물병원 또는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 (동물의 분양·기증) ① 법 제21조제1항의 “동물을 애호하는 자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
2.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
3.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

② 시장은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, 중성화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받은 자에게는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분양해야 할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, 등록 후

분양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보호비용의 부담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보호 비용은 전부 면제한다.

제11조(수수료 감면)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: 전액
2.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: 전액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: 전액
4.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: 100분의 50

제12조(길고양이 관리)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.

제13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 시장은 동물복지 향상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동물 문화보급 및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

2. 동물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

3. 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

4. 동물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

5. 그 밖에 동물보호·복지향상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14조(권한의 위임)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의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보호비용 산출기준(제11조제2항 관련)

1. 사료급여기준

동 물 명	규 격	사료급여기준(1마리/1일)
개, 고양이	10kg 이하	습식 또는 건식으로 300g
	10kg 초과	습식 또는 건식으로 600g
기 타	-	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소장이 정함

2. 관리에 대한 수당

시중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  
(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)

3. 위탁보호수수료(1마리 / 1일)

시중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

4. 포획·수송비

가. 포획 인부의 노임 : 시중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

나. 수송비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포획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.

5. 치료비

가.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.

나.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6. 기타비용

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「동물보호법」 제19조제3항의 범위에서 자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.

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「동물보호법」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, 2018. 3. 20.>

1.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
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

가.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(이하 "유실·유기동물"이라 한다)

나.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(이하 "피학대 동물"이라 한다)

3.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4. 동물학대 방지, 동물복지, 유실·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
5.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·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시장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

행하기 위한 인력·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·관리,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 2017. 3. 21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
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·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·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)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1. 20.>

③ 시·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·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맹견의 관리)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
2.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
3.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 3. 20.]

제13조의3(맹견의 출입금지 등)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2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
4.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[본조신설 2018. 3. 20.]

제21조(동물의 분양·기증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·관리될 수 있도록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, 동물을 애호하는 자(시·도의

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)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4. 5.>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4. 5.>

③ 제1항에 따른 기증·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

제3조(등록대상동물의 범위) 법 제2조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 <개정 2016. 8. 11., 2019. 3. 12.>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개
2. 제1호에 따른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[시행일 : 2020. 3. 21.]

## 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3. 5. 22., 2016. 3. 22.>

1. 국가도시공원: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
2. 생활권공원: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·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

가. 소공원: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나. 어린이공원: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다. 근린공원: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·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3. 주제공원: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

가. 역사공원: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, 유적·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나. 문화공원: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·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다. 수변공원: 도시의 하천가·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·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라. 묘지공원: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

마. 체육공원: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바. 도시농업공원: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

사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

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

다. <개정 2013. 3. 23.>

## 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7. 8. 3.>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4. 삭제 <2011. 6. 7.>

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## 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30.>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

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